

광주 학생 100명 중 2명 학교폭력 피해... 작년비 ↑

시교육청, 16개 시·도 공동조사

피해 응답률 평균 0.3%p 증가
욕설·협박 언어폭력 가장 많아
교내 쉬는 시간 동급생에 피해
“피해지원·재발방지 대책 필요”

광주지역 학교폭력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며 학생 100명 중 2명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16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밝혔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생(10만7111명)이 참여한 전수조사 결과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9%로 지난해보다 0.3%p 증가했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초등학교 0.5%p, 중학교 0.5%p, 고등학교 0.1%p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심한 욕설이나 놀림, 겁주는 말로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36.7%)이 가장 많았다.

언어폭력 다음으로 많은 피해 유형은 △신체폭력 18%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15.8% △강요 7.6% △사이버괴롭힘 6.4%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보다 언어폭력(3.7%p)과 사이버괴롭힘(2.8%p)은 감소했지만 신체폭력(2.7%p), 강요(1.9%p),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2.8%p)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들은 ‘동급생’으로부터 주로 ‘쉬는 시간’에 ‘교내’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가해자 유형에서 같은 반 학생인 경우

46%,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85%였으며 피해 경험 장소로 29.9%가 교실 안, 17.6%가 복도로 나타났다. 학원이나 공원, 놀이터, 노래방, PC방 등 학교 밖 피해 장소 경험도 32.2%를 보였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33.1%, 점심시간 16.4%, 하교 시간 이후 26.4%를 보였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주로 가족 등 보호자(37.3%)나 선생님(31.6%)에 피해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학생들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26%) 스스로 해결하려는(23%) 이유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늘어난 신체 폭력과 괴롭힘 예방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폭력 대응 및 사안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스톱 신청을 통해 피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심리회복·관계개선·법률지원 등), 재발방지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 지속적인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 분석 내용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 동구 여인숙 주인 살해 70대 징역 23년

광주지법 “5년 보호관찰”

4년간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이곳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도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B씨와 평소 원한에 따른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말다툼 끝에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인숙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빈도가 잦았고 B씨는 이에 불만을 토해내며 앙금이 쌓였다.

A씨는 경찰에 ‘B씨는 선풍기가 고장 나 수리를 요청했는데 고쳐주지 않고 도리어 반말로 화를 돋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범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연말연시를 맞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이 성금을 넣고 있다. 모금은 지난 24일 마감됐다.

나건호 기자

‘저자되기 프로젝트’ 전남교육청, 시집 등 출간

‘전교생 31명의 학교생활’ ‘만학도 할머니들의 시집’ 등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한 ‘저자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18편의 책이 완성됐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교원 저자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18편의 책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자되기 프로젝트는 지난 9월1일부터 추진됐으며 학생과 교원들은 책 주제 선정부터 초고·퇴고, 표지 디자인까지 직접 참여하며 1권의 책을 만들었다.

전교생 31명의 만덕초는 1년 동안의 학교생활 과정을 학생들의 시선으로 기록한 ‘만덕이네 학교생활’을 출간했다.

담양 한재초 임오숙 교장은 어려운 한자성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카툰으로 보는 사자성어’를 완성했다.

임 교장은 사자성어의 의미와 유래를 만화로 설명했으며 학교교육 목표를 캐리

터로 만들어 제시했다.

임 교장의 책은 도교육청 미디어포털 ‘전남교육통’에 지난 2018년 3월부터 연재된 100여편 이상의 작품도 포함됐다.

목포중앙여중 방송통신부설중에 재학 중인 만학도 김동임(75) 할머니 등은 시집 ‘꿈 꾸는 세잎 클로버’를 내놓았다.

시집은 할머니들의 배움을 향한 열정, 가슴속 응어리·한이 진솔하게 담겨있다.

이 밖에 ‘우리반에 인공지능이 전학 왔어요’ (김한결 교사), ‘정설아 넌 겨울잠 안자니?’ (박미선 교사·이상미 그림) 등이 출간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작가들은 책을 소개했으며 출간 뒷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 대화’ ‘책 나눔’ 등도 진행했다”며 “전남지역의 모든 학생과 교원들이 책을 1권 이상 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광주 시민단체 “교복비 담합 교복업체 사과·손배” 촉구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담합행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교복업체들의 공개사과와 피해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체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며 “교복업체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압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고 밝혔다”며 “업체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법원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했어도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입찰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교복업체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판결문에 근거해 교복 업체들이 배상해야 할 피해 규모를 파

악해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학부모·학생 등의 피해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1일 입찰 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 29명에게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혜인 기자

법원 “교도소, 조폭 전과자 지정·특별 관리 ‘정당’”

교도소가 범죄조직 탈퇴 사실이 없는 조직폭력 전과자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구속영장에 ‘B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명시돼, 광주교도소 수감 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고 교도소의 엄중

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수감 시설 수용 원인인 범죄는 조폭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이고, 해당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범죄를 실행할 당시 그 폭력조직에서 탈퇴했거나, 실제로는 조직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민섭 기자

광주·전남 크리스마스 연휴 화재 잇따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인 지난 주말 광주·전남 지역 차량·주택 창고가 불에 타는 등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25일 광주·전남소방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46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 받은 승합차에 불이 붙었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불이 확산하기 전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고 가벼운 부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8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기울었지만 정전으로 이

여지진 않았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58분께 담양 담양읍 담양IC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차량에 불이 났다. 제설 차량 운전자 박모(69)씨는 불이 난 직후 바로 빠져나와 화재를 신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브레이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고 화재 사고도 있었다. 22일 오후 12시50분께 광주 광산구 두정동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8대와 소방대원 3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3분 만인 오후 1시22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주택 창고가 일부가 소실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3시간 여 뒤인 오후 4시45분께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창고에서도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조립식 가건물 형태의 창고 건물 일부와 재활용품이 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 관계자는 “겨울 계절 특성상 조그만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화기 취급 및 전열기구 사용 시 화재 예방에 주의하고 차량 등 안전사고 발생에 사전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